



CEO 투데이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A15면

“재정주권 넘겨라”
獨, 그리스에 요구 ▶A13면



한국경제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hankyung.com

제15213호 | 대표전화 02) 360-4114

Market Index	〈주간〉	5판
코스피지수	1964.83	▲ +14.94
코스닥지수	515.81	▲ +3.64
KEBI (종합국고채지수)	117,1821	▲ +0.1519
3년 국고채 금리(연%)	3.38(-0.02)	
환율 (원·달러)	1123.20	▼ -11.10
원/엔(100엔당)	1457.75	
원/유로	1471.84	
미국다우	12,660.46(-60.02)	
일본닛케이	8841.22(+74.86)	
KDB 대우증권		

도요타 60시간 허용하는데 현대차 52시간에 묶일 판

〈노사합의에 의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정부가 추진하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도요타 현지 취재

정부가 휴일근무를 법정 허용 근로시간(주당 52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현대자동차 근로자는 경쟁 상대인 도요타자동차보다 적게 일할 것으로 보인다. 도요타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반면 현대는 52시간으로 제한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업계 간에 적잖은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A10면

후지이 히데키 도요타자동차 미디어담당 부장은 도요타의 교대근무제를 취재하기 위해 지난 27일 도요타 본사를 방문한 기자에게 “도요타는 노사협정에 따라 월간 최대 90시간, 연간 최대 720시간까지 잔업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잔업시간은 노동기본법 ‘36협정’(36조)에 따라 정해졌다”고 말했다. 일본의 노동기본법 36조는 잔업을 시킬 수 있는 기준과 상한선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근로시간 비교

도요타	현대차
•월 90시간, 연 720시간까지 잔업 허용	•주당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무(토일 각 8시간 가능)
•주당 최대 60시간 25분 근무 가능	※정부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중

을 명시하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 혹은 중단할 수 없는 때 허용할 수 있다’고 다소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어 기업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도요타 노사협정에 도월 최대 45시간, 연 최대 360시간의 잔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노사 사전협의를 통해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잔업 한도 시간을 월 최대 90시간, 연 최대 72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요타는 이 조항에 따라 주당 물량이 몰려들 경우 주당 평균 60시간25분(법정내 소정근로시간 37시간55분+잔업 22시간

30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실제 근로시간은 현대차보다 짧지만 작업 물량이 많을 때는 잔업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예가다.

반면 우리 정부는 휴일근무 시간을 주당 한도인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잔업 12시간)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현대차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시간은 평균 주당 14시간 정도다. 이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66시간 정도지만 휴일근무가 작업 허용시간인 52시간 규정에 묶이면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은 도요타의 60시간25분보다 많이 줄어든다. 이는 국제경쟁에서 심각한 취약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지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용창출에 집착해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결국 우리 기업을 죽이는 꼴”이라며 “도요타처럼 노사가 서로 협의해 잔업시간을 결정하도록 유도해야 기업이 그나마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요타(아이치현)=윤기철 노동전문기자 upy@hankyung.com



코리안 드림을 향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제2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역대 최다인 1만5983명의 응시자가 몰린 가운데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4개 시험장에서 29일 치러졌다. 경희대에서 외국인들이 문제를 풀고 있다. /경원민 기자 misa@hankyung.com

흔들리는 시장경제 한경·KDI·시장경제연구원 공동기획

시장·기업 신뢰도 턱없이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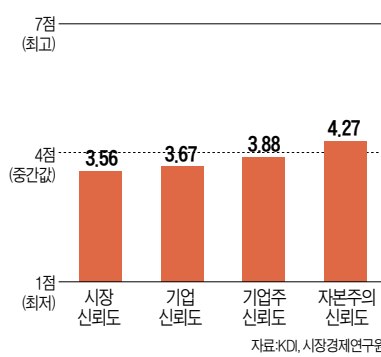
시장과 기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도가 크게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시리즈 A4, 5면

29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시장경제연구원과 공동 기획해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시장경제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장과 기업 신뢰도가 7점 만점에 각각 3.56점과 3.67점에 불과했다. 이는 100점으로 환산하면 시장 신뢰도는 50.8점, 기업 신뢰도는 52.4점으로 낙체 수준이다.

경쟁 보장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가치에 대해서는 4.27점으로 중간값인 4점을 넘었지만 이 같은 원칙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이익을 일부 사회에 환원토록 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균형을 찾아가는 가격 기능을 신뢰하기보다는 정부

우리 국민의 시장경제 인식조사 결과



원칙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뿐 아니라 기업주에 대한 신뢰도도 3.88점(55.4점)을 기록해 중간값인 4점을 밑돌았다. 능력과 노력을 통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 거래를 통해 성공했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 결과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상인 보호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게 나왔다.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에서도 3.74점으로 중간값보다 낮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7점을 최고치로 놓고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의 자율 기능을 지지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 시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성기 기자 sglee@hankyung.com

민주 “재벌세 추진...출총제 부활”

4월 총선 겨냥 ‘대기업 패리기’ 공약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을 겨냥해 대기업의 계열사 과다 보유에 따른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를 추진한다. 또 상위 10대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A6면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언어발

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유종일 특위 위원장은 “재벌의 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 과다 보유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벌세’ 부과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벌세는 법인세법 개정 등을 통해 대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을 과세 대상인 소득에 포함시키고, 금융기

관 대출을 받아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2001년 폐지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부활은 다시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은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재벌의 소득을 과세로 흡수하지 만 그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부자 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 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10대 재벌에 속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받도록 하되 규제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 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허한 기자 why@hankyung.com

한경 Inside

월요 인터뷰

‘바둑 1인자’ 이세돌

▶A12면



TESAT 경제

Travel

Money & Investing

▶A29면

▶A30면

▶B1~16면

레저의 名家 신안그룹 153홀 신안CC 27홀/리베라CC 36홀/그린힐CC 18홀/에버리스GC 27홀/오스타CC 45홀

회원권 하나로 153홀의 놀라운 혜택!

오스타CC VVIP회원권

국내최대 153홀!!

오스타CC SMART VVIP회원권

분양가: 5억원

회원구성: 정회원1인 + 무기명3인

분양문의

02-559-5000

분양협력업체 세림회원권 02)556-5000 / 세원회원권 02)566-1050 / 신비로회원권 02)576-4666 / 월드회원권 02)2058-2000 / 한국회원권 02)536-9999

신안그룹

건설부문 신안종합건설/주식회사 신안/강남엔지니어링/(주)인스빌/(주)코지하우스

금융부문 (주)신안상호저축은행/신안캐피탈(주)/네오어드바이저/(주)그린씨엔에프/바로투자증권(주)

레저부문 신안CC/리베라CC/그린힐CC/에버리스골프리조트/오스타CC/(주)신안스포츠클럽/성우리조트

공익부문 재단법인 순성학재단 호텔부문 호텔리베라 서울/유성 철강부문 (주)휴스틸

머리는 ‘시장친화’ … 물가안정 등 실제 상황선 ‘정부개입 지지’

1 시장에 대한 이중적 태도 <국민경제의식조사>

‘이론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지지한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는 다소 이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과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는 ‘원론적으로’ 존중하지만 실제 상황을 대비한 질문에서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지지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머리로는 시장주의 지지
응답자들은 시장경제의 보편적 가치는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점수는 4.27로 7점 만점에서 중간값인 4를 넘기는 수준에 그쳤다. 시장경제 시스템이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본적인 토대가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외로 낮은 평가가 나왔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문항별로는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발전의 도움이 된다’는 질문만 5.05로 5점대를 기록했을 뿐 ‘경쟁은 결과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거나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다른 질문은 모두 4점대에 머물렀다.

직업별로는 생산직 근로자와 농어민, 미취업자보다는 경영자나 기업의 간부, 고위직 공무원 등의 시장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직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시장지향성은 5.41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시장주의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시장지향성 지수가 평균 이하, 3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황에서는 정부 개입 요청
시장지향성을 실제 상황과 접목시킨 질문에서는 결론이 다르게 나왔다. 시장 자율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다.

시장 신뢰도를 이론적으로 묻는 질문에는 평균값이 4.74로 중간값을 넘었지만 실제 상황을 대입한 질문에서는 3.56으로 중간값 밑으로 떨어지면서 1점 이상 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자유경쟁·사유재산 보호 등 시장경제 가치 ‘원칙적 지지’

최저임금 설정·기업이윤 환원

정부 ‘정책적 역할’ 기대

학력·경제 이해도 높을수록 현실에선 ‘반시장지향적’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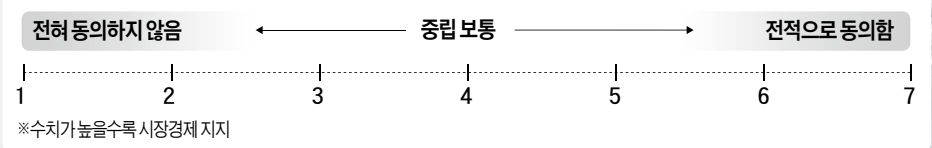
이론과 실제 간 가장 큰 차이는 가격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실제상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홍수로 물량이 줄어들 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답변 성향이 훨씬 컸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가격의 기능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장기능을 얼마나 신뢰할까

이론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평균값 5.05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	평균값 4.80
	경제주체들 간의 자발적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값 4.35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	평균값 4.75

실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수익성이 떨어져 같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평균값 3.58
	세금도 법대로 내고, 환경오염도 발생시키지 않은 기업이 이윤을 났을 때, 사회에 기부할 것인지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평균값 4.03
	정부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환경보호를 이유로 그린벨트로 지정해서는 안된다	평균값 3.98
	저속노동자에 대한 기업 수요가 감소해 이들의 임금이 크게 낮아졌더라도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해 임금을 올려줄 필요가 없다	평균값 3.11
	홍수로 물량이 줄어들어 채소 값이 급등했다면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낮춰줄 필요가 없다	평균값 3.12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저속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감소해 이들의 임금이 낮아질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해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제이해도 높을수록 반시장적 성향
흥미로운 점은 학력과 경제이해도가 높을수록 실제 상황에서 시장지향성이 낮

다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원론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지한다고 답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표출되는 이들의 성향은 반시장지향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점은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대한 조사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에서 가격 기능을 신뢰하기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응답자와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가 정부의 가격 개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동의를 보였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에 대한 태도에서도 다소 이런 이중성이 드러났다. ‘세금도 법대로 내고, 환경오염도 발생시키지 않은 기업이 이익을 났을 때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도록 해야 한다’와 ‘전적으로 기업

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평균값이 4.03으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이영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시장경제를 지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정부의 개입으로 메꾸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성기기자sglee@hankyung.com

“국민 대다수, 경쟁서 얻는 혜택보다 낙오자가 겪는 피해에 더 민감”

전문가 분석 -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우려했던 수준이다.”

이번 조사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29일 “시장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이 원론적인 측면에서 시장 친화적인 입장을 보이다가도 현실 속의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도가 생각보다 낮은 것 같다.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거나 ‘경쟁은 결과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단순명료한 질문에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뜻밖이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 위기론이 ‘대세’로 부각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하나.

▲경제이해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시장경제 원리와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가 높기는 하지만 현실

에선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론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지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

정부 ‘시장 개입’ 따른 폐해에 대한 인식 크게 부족

소득분배·복지요구 두드러져

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 자유롭게 자발적인 거래 허용, 가격 기능, 사유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경제에 외부 충격이 오면 정부가 가격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부가 가격을 제한했을 때 발생하는 왜곡과 폐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입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아닌가.

▲과도한 기대는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컨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거

나 재래상인을 보호하는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인 경쟁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상당수는 치열한 경쟁이 수익성을 악화시키거나 대기업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경쟁으로부터 얻는 혜택보다는 경쟁에 탈락하는 낙오자가 겪는 피해에 더 민감한 것이

다. 시장경제 원리의 핵심은 경쟁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와 혁신으로 성장을 기대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업은 살아남게 하고,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퇴출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쉼페터의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원리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부족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분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응답에는 경쟁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으로 확고하게 나뉘지면서 경제 전체의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백성영기자nyusos@hankyung.com

제4기

카이스트 S+ 컨버전스

최고경영자과정 모집요강

새로운 가치와 트렌드를 제공하는
World Best of Best
명품 CEO 과정

원서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교육기간

교육장소

연락처

○ 기간 : 현재~2012. 2. 10(금)까지

○ 장소 : 서울 강남구 도곡캠퍼스 206호

○ 교 부 :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인터넷 교부 (<http://kcamp.kaist.ac.kr>)

○ 접수 : 방문, 우편, 인터넷, FAX 가능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재직증명서1부

○ 반명함판 사진2매

○ 전형료입금 : 5만원

○ 발표 : 2012. 2. 17(금)

○ 등록 : 합격자 발표시 개별 통보

○ 기간 : 2012. 3월~8월(6개월)

○ 시간 : 매주 월요일 18:30~21:40

○ 서울 강남구 카이스트 도곡캠퍼스강의실 (지하철 3호선 대봉역 도보5분)

○ 책임교수 : 주대준교수(카이스트 부총장)

·전화 : 010-5137-0061 ·E-Mail : josephjoo@kaist.ac.kr

○ 과정사무실

·전화 : 02-3498-7526 ·핸드폰 : 010-4573-3187

·E-Mail : kcamp@kaist.ac.kr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홈페이지(<http://kcamp.kaist.ac.kr>) 접속하여 모집요강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이메일 (kcamp@kaist.ac.kr) 보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심시오 (02-3498-7526 / 010-4573-3187)

KOREA UNIVERSITY

고려대학교 부동산·금융 CRO과정

제16기 최고위과정 원생모집

CRO는 'Chief Real Estate Officer'의 약자로 국토개발과 토지정책 그리고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최고경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1. 모집인원

2. 교육일정

3. 교육목표

4. 교육과정

5. 응시자격

6. 전형안내

7. 문 의 처

50명 내외

2012년 3월 ~ 2012년 8월 (총 6개월 과정) / 주 2회 강의 (월, 목 19:00 ~ 21:00)

① 부동산 및 국토계획 관계자의 전문성 제고

② 다양한 부동산 금융상품의 운영전략, 설계, 이해능력 제고

③ 재개발, 재건축, 테마부동산의 투자분석 및 수익성분석 능력 제고

① 부동산시장과 정책 - 정부의 거시적 부동산 정책, 뉴타운사업 계획, 신도시 기획 등 정부 실무자를 통해 본 정책의 실질적 이해

② 부동산개발금융 - 부동산 금융 및 REITs, ABS, MBS,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실무전문가 초청 전문지식 습득과 시뮬레이션

③ 부동산투자의 실제 - 세계적 기업의 실무투자자를 초청하여 부동산 자본시장과 선진투자기업 이해

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변호사, 회계사

② 건설관련 업계의 경영자 및 임직원

③ 리츠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의 임직원

④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일반 기업체의 부동산 투자 및 관리담당 임직원

⑤ 부동산 및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

①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 1부 (홈페이지 <http://cro.korea.ac.kr> 접속후 [입학안내] 메뉴에서 원서 다운로드)

② 접수기간 : 2012년 2월 24일까지

③ 접수방법 : 가. 방문접수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사지원부(정경관 616호)
나. 이메일 : cro@korea.ac.kr
다. 우편접수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사지원부 앞
※ 서류전형 후 합격자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사지원부

[전화 02)3290-1380, 1383 / 이메일 cro@korea.ac.kr / 홈페이지 <http://cro.korea.ac.kr>]

공동주관

SAMSUNG

삼성생명

Standard Chartered Securities

스탠다드차티드증권

* Real Estate & Finance CRO과정은 삼성생명과 스탠다드차티드증권이 함께하는 산학협력과정입니다.

시론 ‘참여’ 폐해 외면한 학생인권조례

김 정 래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벌금형으로 풀려나 업무에 복귀한 판노현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의 요구와 일반 국민,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가 우선돼야 하며, 이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볼 때 이번 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는 논의하고 싶지 않다. 그 보다는 좌파 교육감들이 밀어붙이고자 하는 학생인권조례 이면엔 깔린 의도와 폐해를 교육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의 핵심은 ‘참여’에 있다. 참여는 노무현 정권의 정치 아이콘으로 큰 힘을 발휘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 아이콘은 그냥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 참여민주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신좌파(New Left)’가 지향하는 정부형태다. 이 신편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를 모태로 한 인민주주의가 진보사상과 결합해 변형된 것이다. 외형상 고대 아테네의 고전적 민주주의와 루소의 자연주의처럼 개인의 직접 참여를 강조하지만, 실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체제 존속상 불가능한 참여가 말 그대로 ‘참여정치’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강조된다. 좌파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참여는 바로

이에 근거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육적 차원에서 이처럼 불가능한 참여를 조정하지 말고 소정의 물을 지켜서 뭇가 성과를 가져오는 참여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우리 교육계에 도입된 발견학습의 폐해는 이해를 더하기 위해 좋은 예이다.

“**교사·학생 1대1 대등하게 설정 실제 성취는 비대칭으로 이뤄져 학교권위 없을땐 부작용만 커져**”

인지심리학 덕에 당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발견학습을 통해 우리 교육계가 한층 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발견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모든 것을 발견한다’는 그릇된 관념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발견학습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면 학생들을 ‘자연 상태’로 그냥 방치하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방임해선 안 된다. 오히려 학생들의 발견이 가능하도록 수업상황을 엄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등 교사들의 수고와 엄청난게 배가된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발견학습은 교육계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둔갑하게 되는 폐단으로 이어졌다.

‘발견’은 ‘성취’를 전제하는 개념이어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만으로 이뤄지지 않

는다. 아이들에게 발견과 성취를 경험하게 하려면,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는 교사의 권위가 뒤따라야 한다. 좌파 교육감들이 내세우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참여’는 유독 ‘교사·학생’의 대칭성을 강조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대등하게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취해야 할 참여는 대부분 교사와 학생 간의 비대칭성을 통해 이뤄진다. 흔히 교사·학생 간 협동과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는 교수·학습 과정을 졸탁동시(倅啄同時)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말은 병아리가 세상을 나올 때 어미 닭과 병아리가 알을 쪼는 시점이 같다는 점을 가리키는 말이지, 어미 닭과 태어나지도 않은 병아리의 대등함을 강조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어미 닭이 알을 쪼는 행위와 강도는 병아리의 그것과 결코 같지 않다.

이를 무시하면 병아리가 죽는다. 여기서 우리는 교사·학생의 대칭성, 즉 동등한 참여를 전제해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에서 내세우는 ‘참여’는 졸탁동시의 비대칭성을 묵살하는 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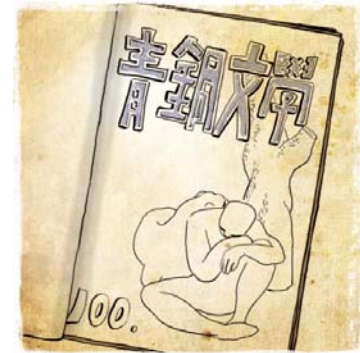
아무렇게나 쪼아대는 병아리처럼 참여 명분으로 학생들을 방기하는 것은 병아리의 생명을 위협하듯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중국에는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해가 된다. 졸탁동시의 대칭성이 부당하듯이, 학생들의 무한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뇌물공여의 ‘선의’를 강변하는 것만큼 억측이다.

천자 칼럼 명동 이야기

1956년 봄 서울 명동의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시인 박인환이 가수 나에심에게 노래를 청한다. 나에심이 사양하자 박인환은 종이에 뾰가를 끄적였다.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그 눈동자 입술은/내 가슴에 있네~’ 라틴음악과 상송에 조예가 깊은 시나리오 작가 이진성이 즉석에서 악보를 만들었다. 마친 술집에 들어선 테너 임만섭은 악보를 받아 듣고 노래를 불렀다.

아름답던 마담이 박인환의 어깨를 토했다. “그 노래 눈물난다. 어쩔라고 그런 노래를 지었노.” 가수 현인이 첫 녹음했고 나중에 박인환이 불러 히트한 ‘세월이 가면’은 이렇게 탄생했다. ‘명동 백작’으로 불리던 신문기자 겸 작가 이봉구는 그 때를 명동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회상했다. ‘다방 레지’가 청마 유치환의 시를 줄줄 외고, ‘명동 황제’로 통하던 주먹 이화룡이 예술가들을 ‘선생님’으로 대접하던 무렵이었다.

텔런트 최불암의 모친이 운영했던 ‘은



성’이라는 술집은 가난한 문화예술인의 집결지였다. 그곳엔 언제든 외상을 주는 녀석함이 있었다. 청년실업가 김동근이 동방문화회관이란 다방을 연 건 1955년이다. 1층 다방, 2층 집필실, 3층 회의실로 구성된 일종의 복합문화공간이었다. 공조 오상순을 중심으로 가톨릭 계열 문인들이 모이던 청동다방, 박수근·박항섭 등 서양화가들이 드나들던 금평다방, 연극인들의 단골이던 은하수다방도 이름을 날렸다.

전후 허무에 젖은 예술인들이 술 먹고

주태를 부리는 일도 흔했으니 밤새워 인생과 예술을 논하고, 출판기념회나 전시회를 여는 열정도 있었다. ‘세월이 가면’을 쓴 지 얼마후 박인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고, 전혜련은 은성에서 술을 마신 다음날 자살했다. 각각 30세, 31세의 젊은 나이였다. 김은성이 조니워커 한 병을 구해와 죽은 박인환의 입에 부어주고 나서 한 모금 마시자 너도 나도 뒤따랐다. 고인도 죽음을 한 셈이다.

그 시절 명동의 난관을 보여주는 전시회가 서울 신문로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제목은 ‘명동 이야기’. 위스키 사용장 ‘포럼’과 명동 뒷골목을 재현한 전시장에는 낡은 책자와 빛바랜 사진, 손때묻은 유품들이 다채롭게 나와 있다. 김수영이 1959년 낸 시집 ‘달나라의 장난’ 옥필 원고, 화가 백영수의 1953년 개인전 방명록, 공초가 쓰던 지포라티타~. 외국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유행의 거리 명동은 이런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어 더 풍요로워지게 아닐까. 이정환은설원희(jhie@hankyung.com

사설

국가와 법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관료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물리려던 제도 개선안이 부처 간 자리다툼 속에 무산됐다고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과징금제를 삽입해주는 조건으로 법무부가 자신들에게 증권선물위원(1급) 자리를 하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위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무부가 겉으로 내세운 논리가 정말 가관이다. 법무부는 형사처벌 아닌 과징금을 매기면 오히려 주가조작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법과 규제가 어떻게 관료들의 밥그릇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는 어찌나 제대로 훑쳐보게 된 것이다.

정부 부처들의 영역 다툼이란 권한과 자리 이권을 놓고 관료집단끼리 충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부가 내건 녹색성장 과 신성장산업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보육·육아 정책, IT정책, 영리병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놓고 한결같이 부처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한을 가져오면 조직, 예산에다 퇴직 후 나갈 자리까지 넘볼때 팔려온다. 규제가 생길 때마다 힘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돈이 생

기기 때문에 관료들은 규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규제가팔로 더할 나위 없는 지대(地代)의 원천이 된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조정능력지수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는 세계은행의 분석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정치가 갈수록 타락해가는 이유도 다를 게 없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가는 멸종되고 정치 자체가 지대추구행위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이익이 사라진 자리를 지역균형, 골목상권, 중기 적합업종 등의 정치적 수사로 무장한 특정 지역, 집단, 기능단체가 들어가 쥔다. 한 이익집단의 지대 추구가 성공하면 이를 지켜보던 다른 집단들이 지대 획득 경쟁에 뛰어들고, 결국 온 국민을 이익집단으로 만들게 된다. 한국 국회에 여야 정당보다 더 강력한 농촌당, 법조당, 약사당, 골목당이 생겨나는 이유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신의 사익 추구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겉으로는 더욱 공익을 내세운다. 한국 정치와 관료 시스템의 수준이자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시장경제 풍요가 길러낸 사회주의 청년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 경제의식 설문 조사 결과 시장경제에 대한 20~30대의 신뢰도가 장년층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보고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나 대졸자 등 고학력층에서 신뢰도 저하가 두드러진다는 소식이다. 물론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장래에 대한 불안 등이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으로 이어질 법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좌파 정권 10년간 강화되어온 좌익 편향적 교육이 치명적일 것이다. 흔히 강단 좌파라고 부르는 좌익 관념주의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수나 교사가 사회 문제에 비판적인 것처럼 보아야 그럴 듯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다. 하지만 전교조 등 강단을 장악한 좌파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곳은 없을 것이다. 교과서가 이념투쟁의 전장이 되는 것도 그렇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체제가 되건 반체제적 저항심리가 구조화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형 인간을 생산해낸다는 것도 잘 알려

진 명제다. 스펀터는 자본주의의 성공이 바로 자본주의를 쇠퇴시키는 요인이라고까지 분석하고 있을 정도다. 시장경제의 혜택을 받은 세대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경제적 번영과 풍요를 당연히 주어지는 조건이요 상수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풍요가 가난과 절망 속에서 시장을 만들고 치열하게 싸워왔던 역사적 성과물이라는 것을 알고지도 하지 않는다. 삶의 진정성과 자기 책임의 가치는 이전 세대들의 역사이자 생활 양식이라고 간단하게 치부하고 만다. 이런 인식의 틀 아래에서 국가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유럽의 풍요 속에서 일태웠던 프랑스 68 세대에서도 자기책임형 인간을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 있다. 누구라도 좋으니 해로운 제3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68세대는 결국 프랑스를 2등국가로 만들었고 지금 엄청난 역사적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시장 경제의 참다운 가치를 전하는 것은 물론 기성세대의 몫이다. 그러나 정치권부터가 이들의 포퓰리즘에 굴복하고 있으니 그것이 더 큰 문제다.

5공 연상시켰던 70대 권력자들의 퇴장

MB정부의 구심점이던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퇴장하고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박희태 국회의장에 이어 최치중 방송통신위원장도 결국 중도 사퇴하고 말았다. 하나같이 측근 비리 아니면 돈봉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뒤임이다. 이들은 실제 중의 실세로 꼽혀왔던 70대 원로들이다. 정권 출범과 함께 정치와 국정의 주요 결정권을 행사해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런 사이에 과거 5공화국 독재정권을 방불케 하는 권위주의가 부활해 영일대권, 방통대권이란 호칭이 공공연하게 나돌았고 이들의 주위에 왕자관이나 정치적 양자니 하는 2인자들이 뒷골목 권력을 행사해왔다. 금융계에서 4대천왕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로 실세들의 퇴장은 당연한 귀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때를 놓쳤다고 해야 옳다. 특히 이상득 의원과 최치중 전 위원장은 진작에 물러났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갖 기회주의자들의 집합체였던 선진연대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행년과의 인연을 지금도 이력서에 쓰고 있다. 엄지와 검지로 구분하지 못하는 원로에게 첨단산업인 통신을 맡긴 결과 SNS는 새로운 소통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괴물이 돼버렸고 2040과 5060은 급기야 세대전쟁까지 치르게 된 상황이다. 그의 치적이라는 종편 사업자 선정은 각종 특혜 의혹과 로비설이 끊이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 마이크를 길게 잡고 에~! 에~!를 연발하며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새삼 가르치려고 든다면 누구라도 질색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이들 원로는 대부분이 5공 스타일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5공식 판데 정치라는 평판이 높았으니 전두환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486들이 그토록 원초적인 저항심리를 보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노인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버티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다.

성기동맥혈류충전기

남성(性)운동기구 의료기기 100% 환불제

30일 사용동안에 효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유 없이 100% 환불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100% 환불제를 보장하지 못하는 남성(性)기구를 어떻게 믿고 구입하시겠습니까?

광고심의필

2007-GN1-03-0023

이 특허의 원리는 전립선의 문제는 물론 힘이 없고 빠르고 “작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진4개국 발명특허품! “미국특허상표 국(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책임자는 V.S.T 창생사제품에 대하여, 새롭고 유용한 발명품의 특허신청을 받았다”본 발명은 음경동맥 혈류강화기구에 관한 것이며, 전기로 음경근의 확장 및 수축 운동을 실행하는 이 전기음경동맥 혈류기구는 해면체의 혈류이동을 촉진시켜 좋아진 남자들의 해면체 혈관을 회복시킨다.

*위의 내용은 미국의 발명특허국의 V.S.T 창생사 제품의 특허증에 기재된 내용임.

발명특허의 원리: 스위치 한번만 누르면 단 3분(180초)에 100번 이상의 강력하고 정확한 5mm 운동이 전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자동으로 쏙 빠져나오는 남성(性)운동기술로 국내와 미국과 독일과 일본 등의 선진국 등에서 발명특허를 획득하고, 94. 제22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 신기술대전에 입상하였으며, 청와대에 초대되어 대통령님에게서 격려의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서 30년 이상을 같은 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한 제품만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계적 발명품을 완성시킨 창생메디칼입니다.

창생메디칼은 약이나 식품이나 다른 물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속이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특허

미국특허

독일특허

일본특허

국제특허

FDA등록

일본(Japanese)창생메디칼 제품 판매소 JAPANESE : www.tao-it.co.jp 東京都中央区入船2-4-4, 今村B/D302 Tel : 81-3-3523-1239

심의번호 2010-GN1-13-0063

미국식약청 FDA등록번호: 9088839, FDA의료기기 등록번호: 876 5020 국제특허질인증시스템 EN ISO 13485:2003 CERTIFICATE No.07 0019 SJ 제22회 스위스제네바 세계 신기술대전 입상 창생메디칼 080-765-4555



일상 031-975-1221



전화 주시면 바로 전화드립니다.

010-9751-2245
010-9753-2245
010-9756-2245
010-9761-2245

· 한국발명특허 : 제0430620 · 일본特許 第 : 413 92 886 · 미국발명특허 : No 7, 118, 527, B2호 · 독일발명특허 : Nr.103 92 886
· 국제특허질인증시스템 ENISO 2003-2005 / 예금주 창생메디칼 국민은행: 90233312333 농협: 02303300-08

www.vstkorea.com

창생메디칼

CHANG SAENG MEDICAL SINCE 1972.21

복지·소득재분배 확대 “OK” … 기업규제 “NO”

2 정부 경제정책 태도

대기업 진출업종 제한
재래시장 상인 보호 ‘지지’

노사분쟁 발생시에도
당사자간 해결 유도해야

우리 국민들은 기업규제 노사관계 부동산 정책 등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지지하는 반면 중소기업 보호와 소득재분배 등에서는 정부 개입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15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경제정책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정부·기업활동에는 간섭 말아야 이번 설문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대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은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주도해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자칫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혁신과 창의적 노력을 꺾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연령대, 교육수준, 연소득과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장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가격이 뜸들거리는 부작용을 경험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노사간 분쟁이 생겼을 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는 쪽이 우세했다.

◆중소·재래상인 보호 필요 국민들은 적어도 기업활동에 관해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와 소득격차 등 시장이 자생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보호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이 특정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보다 우세했다. 정부가 재래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SSM 진출을 제한하는 데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느냐는 문항 역시 3.00점으로 빈부 격차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요청했다. 부유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중

세는 돈을 더 벌려는 동기부여를 감소시키므로 반대한다’는 생각보다 강했다.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99점으로 중간값(4점·중립)과 큰 차이가 없어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조사는 시장과 정부 간 기능 재조정에도 대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와 시장 간 관계의 논의가 단순한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각론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는 약자 옹호로 표 얻으려는 속셈”

»A1면 ‘포퓰리즘’에서 계속

아류파이 포퓰리즘 연구회원들은 정치권의 대기업 때리기가 약자를 옹호하는 이미지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정략적 판단의 결과로 해석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지나친 대기업 규제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법인세 인상 움직임도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은 혁신을 통해 좋은 실적을 내려는 기업들의 사기를 꺾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신도철 교수도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금 인상이 기업들을 외국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법인세 증세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없다”며 “경제적 자유의 확대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조영기 교수는 “작다고 무조건 보호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성장을 균형에 맞춰야 하는데, 균형을 위해 성장을 억제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해서도 재래시장 보호보다는 ‘대형백화점의 서빙버스 금지’와 같이 성공할 수 없는 규제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옥죄기가 중소기업 살리기로 가지 않으면서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연례 행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정희 대구대 교수는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는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뚜렷한 근거없이 막연히 부자 때려잡이식의 ‘1대 99’라는 구도를 따라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각 정당의 대기업집단 때리기는 전 세계적 양극화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도 있지만, 가진 쪽과 힘있는 쪽에 대한 지나친 질타는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의 ‘재벌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조차 명백한 이중과세로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계열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2000년 법 개정 때 비과세 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비과세 폭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적어 확대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보유 자본율에 따라 30~100%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70~100%, 영국은 100%, 독일 95%까지 해주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은 2001년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가 재정부 차관,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세제실장일 때 시행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정책인 의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성규 안동대 교수는 “잘되는 기업이 있어야 사회가 흥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곤란하다”며 “선거 때문에 중심을 잃는다면 경제에 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재벌, 노력없는 富 대물림 안돼”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포퓰리즘 대책 연구회 소속 회원들은 최근 일부 대기업이 자영업자들이 하는 업종에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비판했다. 중소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더러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인 기업가 정신에도 한참 동떨어진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 2~3세가 뺑뺑이나 커피숍과 같은 분야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진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선대 창업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 교수는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반기업, 반자본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도 “일감몰아주기가 상속세 회피

를 위한 수단이 되면서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도 “재벌 2~3세 정도라면 위험을 안고서라도 남들이 가지 못하는 분야를 찾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진정한 기업가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이뤄지는 원인으로 높은 상속세 부담을 지적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대주주가 자녀에게 지분을 직접 물려줄 경우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고 현금을 빨리 뽑아낼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게 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박신영 기자 hglee@hankyung.com

복지 늘리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중위 소득자들만

보편적 복지를 더 찬성

우리 국민들은 복지를 지금보다 늘리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복지 혜택을 고르게 제공하기(보편적 복지)보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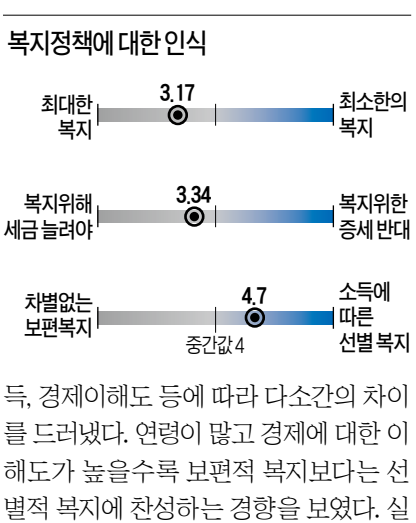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가능한 최대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소한의 필요 부분만 지원해야 한다는 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 극단을 1점(최대 복지)과 7점(최소 복지)으로 놓고

설문 응답자의 성향을 점수로 나타낸 결과 평균 점수가 3.17점으로 산출됐다.

세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복지 수준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 ‘그렇다’고 응답한 이들이 많았다. 평균 점수로 따져볼 때 3.34점으로 중간값(4점)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선택적 복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복지 혜택을 제공(보편적 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의 평균 점수는 4.70점으로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는 쪽이 우세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태도는 연령과 소



득, 경제이해도 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드러냈다. 연령이 많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

제 50대의 문항 평균 점수는 4.96점이었으나 20대는 4.52점에 불과했다.

소득에 따른 분포는 좀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는 선택적 복지를 지지하는 반면 중간 소득자는 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를 담당한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고소득자는 보편적 복지에 따른 혜택보다는 세부담 증가와 정부 재정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자도 보편적 복지로 인해 혜택이 분산되는 상황을 감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왜, 대한민국 CEO들은 IGMP 최고경영자과정에 몰릴까요?

IGMP 세계경영연구원

우리 문화를 경영에 접목하여 한국적 글로벌스탠다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경영인으로 도약 한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CEO 700분이 인정한 평생 지식네트워크 ‘IGMP 최고경영자과정’ 일년에 단 한번, 오직 80분의 CEO만을 모집합니다

IGMP 12기 입학안내

입학자격 : 기업체 최고경영자 및 고위 임원, 정부기관 고위 책임자(80명 선착순 마감)

교육기간 : 2012년 3월 5일(월) ~ 8월 20일(월), 20주

문의 : 김나영 주임연구원, 이정아 본부장 T.02)2036-8314, 8384 www.igm.or.kr ※1월 말까지 등록하시면 early-bird 10% 할인해 드립니다.

IGMP졸업생은 자동적으로 'IGMP 700인클럽' 멤버가 됩니다

700인클럽이란? IGMP총동문회가 모여가 되는 클럽으로 17부터 11기까지 810명이 모여 평생동안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며, 지식 네트워크를 하는 한국 최초의 고층 CEO클럽

평생 함께할 700인클럽 주요동문

윤석균 웅진그룹 회장, 문규영 이주그룹 회장,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왕귀에 대한전선(주) 명예회장, 이상용 세방전자(주) 부회장, 정도연 일양약품 회장, 박진수 ㈜엘지화학 사장, 김지현 하이트랙주(주) 대표이사 사장, 이상윤 ㈜농심 부회장, 이혜선 CJ오쇼핑 대표이사, 최병오 패션그룹 회장, 김홍식 타히대우상용차(주) 대표이사, 정환수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성낙양 두산동아(주) 대표이사, 박재현 ㈜코스틸 회장, 오병훈 ㈜루튼 회장, 구자관 (주)삼구 아이먼비 대표이사, 이광준 의료법인경희의료재단 이사장, 민복기 이엑스스포츠코리아(주) 대표이사,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구자철 (주)한성 회장, 김남경 동원엔터프라이즈 부사장, 유 기업인 810명

MB정부 들어 공정경쟁 약화·가격통제 강화

흔들리는 시장경제 한경·KDI·시장경제연구원 기획

③ 커지는 반시장주의

‘이명박 정부 들어 시장경제 원칙이 퇴보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경제연구원이 공동 기획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가 ‘시장과 기업 프렌들리(friendly)’를 표방했음에도 경제 주체들은 한국사회가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뒷걸음치는 시장경제

경제학에서 정의하는 이상적인 시장경제의 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경제 주체들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반영하며, 개인의 소유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원하는 가격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사회는 그러나 최근 5년간 이런 원칙에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는 게 이번 조사의 결과다. 설문은 △공정한 경쟁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정부규제 △

사유재산권 보호 △자유로운 거래 등 5개 항목에 걸쳐 5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물어봤다. 4를 중간값으로 놓고 상황이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그보다 높게, 후퇴했다고 느끼면 그보다 낮게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최소 1점, 최대 7점까지 주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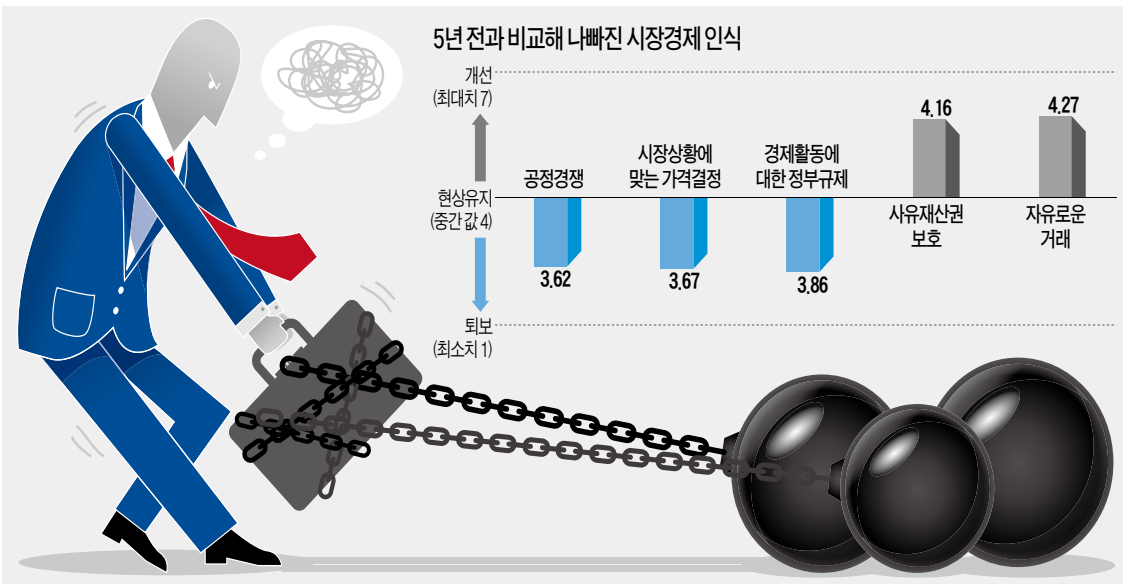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공정경쟁(3.76점), 가격결정(3.84점), 정부규제(3.98점) 등 3개 항목은 중간값보다 낮았다. 5년 전과 비교해 악화됐다는 것이다.

사유권 보호(4.28점)와 거래의 자유(4.33점) 2개 항목만 조금 나은 평가를 받았다.

◆ 절대 기준으로도 ‘중간 이하’

5년 전과의 비교와는 별도로 진행된 ‘지금의 시장경제’에 대한 평가 결과도 ‘중간 이하’로 나왔다. 공정경쟁(3.65점), 가격결정(3.91점), 정부규제(3.59점) 등 주요 평가항목이 중간값인 4를 밑돌았다.

연구용 시장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과거와 비교해 공정경쟁은 약화하는 반면 가격에 대한 통제와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는



글로벌 경제 위기후

정부 시장개입 확대

소득 불평등도 심화

사유재산권 보호

거래 자유만 다소 개선

강화되는 추세라는 게 이번 조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연구진들은 이에 대해 정부 출범 초기 규제완화 및 폐지, 친기업·친시장경제를 강조해오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시장개입 확대로 시장친화적 정책이 급속도로 후퇴하면서 일반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극명하게 드러난 소득불평등 심화 등 자본주의 문제점으로 인해 반(反)시장주의적 성향이 강화된 것도 원인으

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만드는 게 아니며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가 이처럼 낮게 나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KDI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시장의 실패를 경계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성기기자sglee@hankyung.com

경제활동 주축 30,40대 ‘시장경제 퇴보’ 목소리 높아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시장경제가 퇴보하고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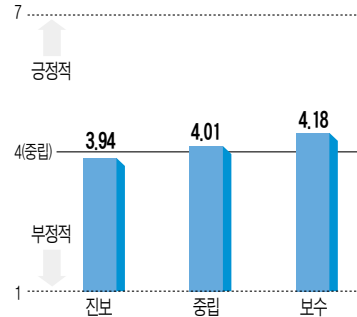
50대, 60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갖고 있는 고령층은 물론 반사회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20대도 시장기능이 다소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령대별 평가에서 20대(4.07점), 50대(4.05점), 60대(4.13점)는 모두 중간값(4점)을 넘겨 5년 전과 비교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30대(3.98점)와 40대(3.97점)는 중간값을 밑돌아 시장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KDI 측은 경제활동의 주축인 이들 세대가 ‘우리사회가 반시장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을 20대보다 강하게 갖고 있다는 점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연구진들은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일수록 시장기능을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과 연결지었다. 스스로를 진보적 성향이라고 규정한 응답자들은 과거에 비해 시장경제가 퇴보했다(3.94점)는 쪽에 높은 지지율을 보인 반면 보수적 성향자들은 개선됐다(4.18점)는 쪽을 지

정치성향별 시장기능 평가



고소득·진보성향 일수록

시장기능 더 비판적

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소득이 많을수록 시장기능에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응답자를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시장기능에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와 연결된다

고 KDI 측은 분석했다.

이성기 기자sglee@hankyung.com



2012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12 지식재산 강국 원년을 선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덕 네오티즌 대표, 윤종웅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지호 수원삼일공고 학생, 이대통령, 김형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생, 김황식 국무총리, 박수경 이화여대 학생 ▶**관련기사 A19면** /김병연 기자 misaon@hankyung.com

자산 5000억이상 상장사만 준법지원인

법무부, 中소는 적용 제외

정부가 준법지원인 적용 대상을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축소시켰다. 중소기업에까지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기존 상법 시행령안에 대한 제계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한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28일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총 430개(1월2일 기준 금융사를 제외한 전체 상장회사 1659개의 25.5%)가 도입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5000억원 이상 287개(17.0%)로 줄었다. 유가시장 상장사의 38.4%, 코스닥의 2.6%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이다.

법무부는 또 준법지원인의 자격에 대해 법률학 학사라는 최소한의 학력요건도 폐지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식과 학력보다

는 실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와 5년 이상 법학 조교수 근무자, 법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상장회사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준법지원인 자격이 부여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나마 기준이 상향 조정돼 다행이지만 준법지원인제가 여전히 불필요한 중복 규제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단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더라도 처벌·제재하는 대신 이를 도입한 기업에 유인책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임도원/김수연 기자 van7691@hankyung.com

“4대강 독 높이기, 3500억 혈세낭비 우려”

감사원 “8개 독 공사 불필요”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전국 94개 저수지의 독 높이기 공사 중 8개는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35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저수지 독 높이기 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정부는 4대강 유역에 2조2986억원을 투자해 94개 저수지의 독을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다. 추가 저수량 2억 4200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농어촌공사는 전국 저수지 독 중 공사가 꼭 필요한 94곳을 뽑았다. 독을 높였을 때 얼마나 더 저수량을 확보해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업무 착오로 공사가 필요한 8개 독은 빠지고 필요없는 8개가 포함됐다. 결국 예산 3594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고 용수 공급 가능량은 448만㎥가 줄어든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예산낭비가 심각했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총 공사비 300억원 이하는 턴키발주(설계·시공 일괄발주)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개별 독 높이기 공사비용은 수십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발주를 담당한 농어촌공사는 몇 개 독 공사를 묶어 공사비를 300억원 이상으로 만든 뒤 턴키발주를 했다. 결국 일부 업체가 공사를 독식했고 최대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남윤선 기자 inkings@hankyung.com

흔들리는 시장경제 한경·KDI·시장경제연구원 공동기획 ④ 세대·계층간 인식단절

소득 많을수록 ‘反시장주의 성향’ 강해

시장경제의 한 축인 대기업과 경영자에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도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세대별 시장경제 인식차 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개발연구원(KDI)·시장경제연구원과 공동 기획해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기업 신뢰지수는 3.46, 경영자에 대한 인식은 3.88로 나타났다.

최고 신뢰도를 7점으로, 최소치를 1점으로 놓고 점수를 매기도록 했는데 둘 다 중간값인 4보다 낮았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의 15.4%가 최저 점수인 1을 준 반면 최고 점수인 7을 준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대기업 였어 자녀들이 손쉽게 부를 축적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눈에 띄는 점은 세대별로 기업과 기업인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는 것이다. 연령별 기업 신뢰도 분포는 ‘U’자형을 그렸다. 20대와 50·60대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30·40대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40대의 기업 신뢰도가 3.51로 가장 낮았다. 이외로 20대는 기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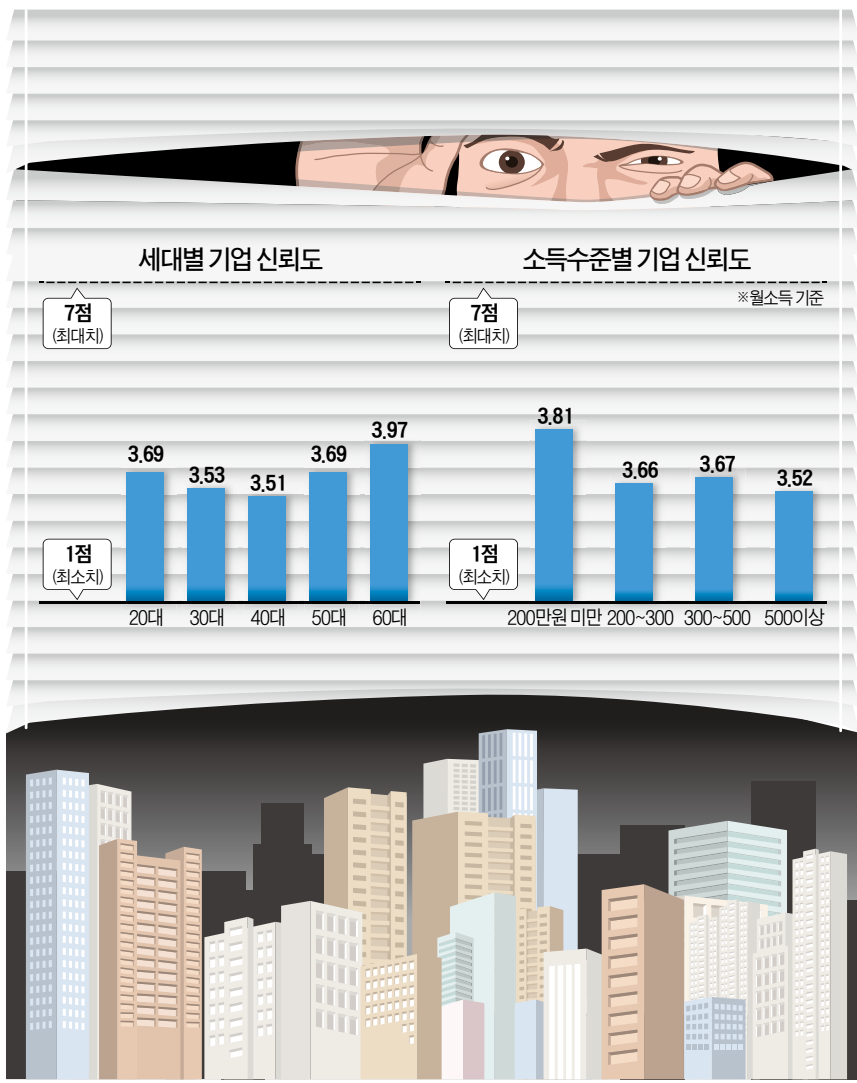
시장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기업은 능력과 노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배경과 권력 및 로비에 의해 성장했다는 인식이 더 컸다”며 “이로 인해 기업수에 대해서도 존경할 만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일수록 반시장적 성향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분포에 의해 지역, 소득, 직업, 연령대별로 1500명을 추출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정확히 ‘중도’였다. 1을 매우 진보적으로, 7을 매우 보수적으로 놓고 스스로를 평가하라는 항목의 조사 결과가 정확히 중간값인 4.00으로 나왔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별 분석에서 30대가 스스로를 가장 진보적으로 규정하고 있

대기업·경영자에 대한 인식 30,40대 가장 비판적 20,50,60대 다소 긍정적

고학력·진보성향 일수록 자본주의에 가혹한 평가

다는 사실이다. 30대의 평균값이 3.75로 20대(3.81)보다도 낮았다. 50대(4.17)와 60대 이상(4.38)은 ‘보수’로 규정했다. 교육수준과 정치적 성향 간의 연관성도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학력이 낮을수록 스스로를 보수적으로 규정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수적으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는 진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평가했다.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모든 구간에서는 평균값이 4를 넘어 스스로를 보수로 분류한 반면, 그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 4를 밑돌아 ‘진보’ 성향이 강했다. 시장경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계층이 자본주의에 대해 훨씬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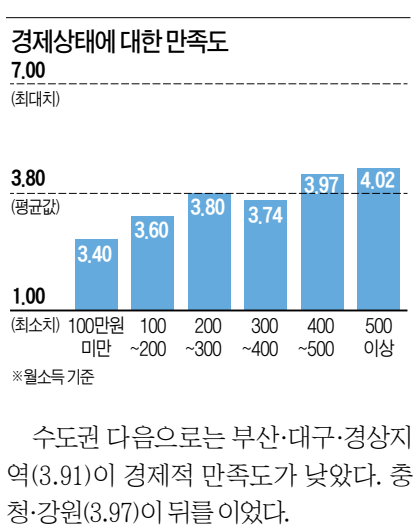
KDI 관계자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현실에서 시장실패를 직접 경험했거나, 관찰을 통해 반(反)시장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우울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 ‘경제상태 불만족’

최고 7점에 평균 3.8점 수도권 만족도 가장 낮아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경제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경제에 낮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 1500명에게 경제 만족도를 묻는 조사는 4점을 중간값으로 놓고 최대 7점에서 최저 1점을 매기도록 했는데 평균 3.8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중간값 이하로 낮았다. 만족도는 나이나 학력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

령대에서 중간값인 4.0을 밑돌았으며 점수도 3.75~3.93점 사이에 분포됐다. 교육수준별 분석에서도 중학교 졸업이나 대학 졸업이나 3.82점으로 같았다. 다만 소득수준별로는 만족도가 엇갈렸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평균값이 4.02로 중간값을 약간 웃돌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00만원 미만은 3점대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편차가 컸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만족도가 3.51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의 집중화에 따른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됐다.



광주와 전라지역은 4.68로 경제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직업별 분석에서는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농어민이 4.09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비교적 고소득 직업으로 분류되는 전문직과 사무·관리직은 3.86에 그쳐 학생은 물론 무직 및 연금생활보다도 만족도가 낮았다. 시장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거주지역별 분석 결과에서도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의 경제적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국민이 경쟁에 따른 정신적 피로감을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충제는 아닐로그식 낡은 규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 상반기 출자구조 지분도 공개 문어발식 확장 감시할 것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야당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에 대해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아닐로그 방식”이라며 1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정회사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경제가 성장하면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영위 업종이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기업 규모가 아닌 대기업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을 넘어 서민 생업 분야까지 무분별하게 침투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출충제 부활보다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미래를 위해 신성장산업 분야로 과감히 진출하지 않고 총수나 친인척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사익을 챙기거나 증여·상속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중 대기업들의 출자구조를 그림으로 그린 지분도를 공개하겠다”며 “지분도를 공개하면 일반인도 복잡한 출자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



게 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때 그 기업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최근 4대그룹이 시스템통합(SI), 광고, 건설, 물류 등 4개 분야에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경쟁 입찰키로 선언한 것을 예로 들었다. 공정위는 4대 그룹이 발표한 자율선언을 기초로 한 모범거래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해 보급하고 30대 기업집단도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한전, 캐나다 우라늄 개발회사 지분 인수

美 개스힐 광산도 함께 우라늄 연간 545t 확보

한국전력은 캐나다 우라늄 개발회사인 스트라스모어(STM)의 지분 14%를 800만달러에 인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또 이 회사가 보유한 미국 와이오밍주 개스힐 우라늄 광산 지분 40%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으로 갖는 계약도 맺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번 계약으로 개스힐 광산이 생산을 시작하는 2016년부터 20년간 매년 545t의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연간 우라늄 소비량(4500t·작년 기준)의 12%에 해당한다. 개스힐 광산은 잠재 매장량이 2만7000t에 달하는 중형 광산으로 향후 4년간 정밀탐사 후 개발과정을 거쳐게 된다.

STM은 미국 내 11개 탐사·개발 우라늄 광산을 가지고 있다. 한전은 STM 지분을 우선 사들인 뒤 개스힐 광산의 탐사 매장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확인되면 32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광산 지분을 40%까지 인수할 방침이다. 한전은 2020년까지 우라늄 자주개발을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캐나다 데니스사, 니제르 이모라렐 광산 등 해외 우라늄 개발회사 및 유망 광산의 지분 인수를 적극 추진해왔다. 한전 관계자는 “작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STM의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 적절한 투자시기라고 판단했다”며 “탐사가 진행 중인 개스힐 광산의 사업성을 들여다보면서 향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돼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성명서

“출연(연)간의 벽을 허물고 정부는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을 단일법인화함으로써 연구기관·연구분야·연구인력간 벽을 허물어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어려운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향한 과학기술 역할의 중차대함을 인식할 때 ‘개방과 협력의 선진화된 연구체제’를 조속히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출연(연) 연구현장에서 개별 법인격 소멸에 따른 혼란과 불확실성 등의 우려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출연(연)의 이러한 대립각은 국가 미래와 과학기술계를 고려할 때 심각히 우려할 일이다.

이번 논의의 근간이 되는 ‘출연(연) 선진화 방안’은 민간 과학기술계에서 지난 2년 동안 산업계, 학계와 함께 출연(연) 당사자들과 다양한 소통과정을 통하여 마련한 방안이 근거한 것이다.

정부가 국회로 이송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출연(연)간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장치가 나타난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출연(연)의 우려를 받아들여 출연(연) 브랜드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점과 향후 구조조정이 없다고 밝힌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정부와 출연(연)은 국회의 정치일정을 고려하여 서로 신뢰하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행보는 향후 글로벌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조속히 실천되어야 한다. 신 정부의 출범 때 마다 되풀이 되어온 출연(연)의 구조변화를 이번의 입법화로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출연(연)의 발전적 행보를 기대하고자 한다.

2012년 2월 2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흔들리는 시장경제 한경·KDI·시장경제연구원 기획

학교서 외면받는 경제교육 시장·기업 불신 키웠다

⑤ 교육실태의 부작용

서울대 경제학부의 L교수는 얼마 전 지방의 한 사립대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L교수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며 경제적 인센티브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한 순간 강의를 들던 교사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자가 어떻게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냐”며 반발했다. 다른 교사들도 이에 동조하더니 3분의 1가량이 아예 강의장을 나가버렸다.

◆유명무실한 경제교육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부실한 경제교육을 지목했다.

우선 경제 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경제는 어렵고, 입시가 불리하다는 인식이 학생은 물론 교사들 사이에서도 팽배하다.

중·고등 경제수업 41시간
전공교사 비율 10%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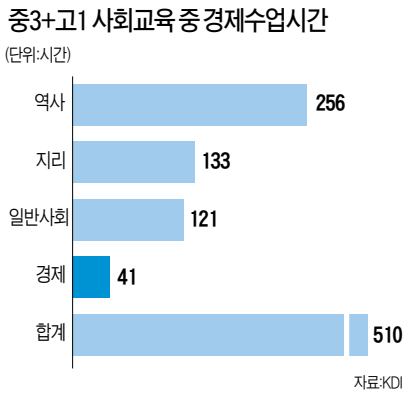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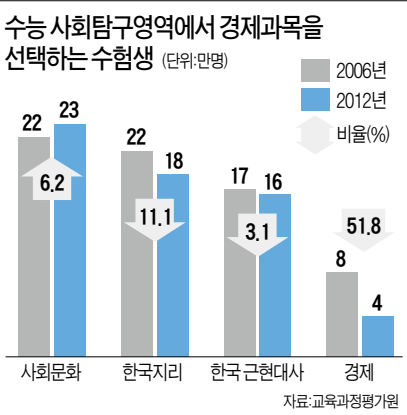
“경제 어렵다” 인식 팽배
수능 선택 6년새 절반 줄어

2일 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4만1726명이었다. 2006년 8만6666명에서 51.8%나 줄었다.

사회탐구영역 11개 과목 중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정 외에 고등학교 2~3학년 때 ‘심화과정’으로 경제를 배우는 학생은 전체 고교생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정치 사회문화 윤리 등 다른 과목을 선택한다.

김진영 KDI 경제교육실장은 “공통과정만 들을 경우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경제를 배우는 시간은 41시간에 불과하다”며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개념을 가르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경제학 전공 교사도 적어
중·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경제학 전공자의 비율은 중



학교가 5.9%, 고등학교는 10.6%에 불과하다. 비전공자 중 대학에서 경제 관련 강좌를 2과목도 듣지 않은 비율은 중학교가 47.1%로 절반에 육박한다. 고등학교도 28.3%에 달한다. KDI가 전국 중·고교 경제교사 10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다.

교사들의 재교육 기회도 제한돼 있다. KDI와 한국은행, 자유기업원 등에서 제공하는 경제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는 연간 1860명 정도다. 전체 사회과 교사 2만5000명의 14분의 1에 불과하다.

교사들의 자질과 함께 주관적인 교과 내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장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경제교과서를 분석해보면 기업활동의 목적에 대한 저자의 주관적 해석이 반영돼 있거나 대·중소기업 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내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신입생 면접에서 경제관을 물어보면 10명 중 9명은 반(反)자본주의를 ‘모범답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등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의 보호 등 기초적인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며 “놀랄 만한 공교육의 공백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與野 “사병 월급 인상” ... 선심성 공약 경쟁

새누리 “월 40만원까지 지급”
민주 “전역 때 630만원 보상”

4·11 총선이 가까워지자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주로 청년과 장년층의 표심을 겨냥했다. 이들 정책이 실현되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에 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정부 부처와 전혀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들을 일단 내놓고 보자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재탕’ 공약도 많다.

새누리당(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2일 약속이나 한 듯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10

여야가 검토중이거나 발표한 ‘포퓰리즘’ 정책들	
새누리당(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중소기업 취업 예정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기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
-병사 월급 40만원으로 인상	-청년실업자구직촉진수당 지급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공공원룸 월 5000가구 공급
-전·월세 대출이자 감면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지급	-전월세 상한제, 주택바우처 도입
-남부권신공항 재추진	-비정규직 정규직과 동일임금
-재벌사회적책임 기본법 도입	-순환출자규제 추진
	-재벌세 도입 추진

만원 안팎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복무지역별로 차등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 1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올해 직업군인을 제외한 병사(44만명)에게 5285억원의 월급이 책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매달 30만원의 사회복귀 지원금을 적립해 전역할 때 630만원(21개월 기준)을 보상한다

는 대책을 제시했다. 2017년까지는 매달 21만원을 지원하고 2022년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연간 최대 1조7900억원으로 추산했다.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갖가지 공약도 발표되고 있다. 민주당은 300명 이상 기업에 매년 청년을 의무적으로 3% 고용하라고 비율까지 정했으며, 청년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방안도 공약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80%의 등록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년층을 겨냥해선 직장파와 무상보육, 주거복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일괄 맞추는 방안을 총선공약개발본부에서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대출 이자도 경감해 주거나(새누리당) 전·월세 상한제(민주당)도 공약에 오르내린다.

재탕 정책도 나온다. 병사 월급 인상 공약은 이미 2006년 박근혜 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나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내놓았으며, 남부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전제장치 없는 ‘국회 입법 포퓰리즘’이 문제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대기업 때리기’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재벌세에서부터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금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잘못된 정책들은 국회에서 걸러질 수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나쁜 법’을 만드는 것은 제어하기 어렵다. 국회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정부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는 까닭이다.

◆국회 포퓰리즘 도 넘어
한국경제신문이 발족한 포퓰리즘대책연구회 ‘아류파이(Occupy) 포퓰리즘’은 지난 1일 서울 필동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포퓰리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고인석 부천대 교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하면서 졸속입법과 부실입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8대 국회 지역구의원 241명의 공약 4516개를 분석한 결과 실현된 것은 35%에 불과하다”며 “일단 법안을 내놓으면 의정 ‘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정권이 작은 여론 동향에도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말



출총제·재벌세 등
부작용 키울 정책 쏟아내

사후 평가기관 만들어
무차별 의원입법 걸러내야

했다. 그는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검토를 하지 않자 본인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입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를 리닉센터장은 “국회의원 상당수가 입법원칙은 고사하고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입법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 조례개정 등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등 부작용 우려
참석자들은 국회의 포퓰리즘이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국회에서 생각하는 좋은 법은 표를 가져다주는 법”이라며 “이같은 인식 때문에 준법지원인 출자총액제한제 재벌세 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 같은 정책들이 바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등을 풀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율 기구 인상처럼 입법을 할 때 정부 부처와 충분한 협의없이 돌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국회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한데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는 실패라는 잘못된 인식이 너무 퍼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입법평가기관 등 견제 필요
최광 한국외대 교수는 “가칭 ‘국회 입법기본법’을 만들어 포퓰리즘 법안이 쏟아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소한의 검토를 하고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입법을 한 의원들이 책임지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환 한신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익단체나 공익을 방자해서 표심을 잡으려는 입법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심판할 수 있는 입법 평가기관과 같은 상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입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성 합리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의원들의 말바꾸기에 대해 벌칙을 주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 공청회의 경우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청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국회가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견제책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며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 등 좀더 큰 관점에서 대응책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옥진 이호기 기자 venture@hankyung.com

프리미엄 남성 슈즈 Select Shop

MAYFAIR

메 · 이 · 페 · 어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4F MAYFAIR (02-3438-6188)

Gold Brothers

Santoni

Paraboot

BARKER

JL JOHN LOBB

SAPHIR

ORCIANI

프리미엄 남성 잡화 Select Shop

ROYAL MILE

로 · 열 · 마 · 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4F ROYAL MILE (02-3438-6142)

ESPERANTO MILANO

Whitcomb COX

MAISON de HIRBON

GANZO

F. CLIO

CYPRIS

HIRSCH

RIMOWA

흔들리는 시장경제 한경·KDI·시장경제연구원 공동기획 ⑥·끝 결산 좌담회

“양질 일자리 많아져야 시장 신뢰도 높아져”

◆참석자

현오석 KDI원장
김호식 시장경제연구원장
박정수 서강대교수(사회)

‘시장과 기업에 대한 턱없이 낮은 신뢰, 머리로는 시장친화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부개입 지지, 소득이 높을수록 강한 반(反)시장주의 성향-’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30일부터 5회에 걸쳐 게재한 ‘흔들리는 시장경제’ 시리즈를 통해 우리 사회가 시장경제를 인식하는 수준을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를 함께 기획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현오석 원장, 시장경제연구원의 김호식 원장,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대담을 통해 올바른 시장경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들어봤다. 사회는 박교수가 말했다.

◆박정수교수=이번 조사는 1500명의 국민을 직업, 교육, 소득, 지역, 세대별로 나눠 이뤄졌다.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최초의 실태조사다.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김호식 원장=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현실 상황에서 반시장 지향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마디로 시장경제 체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시장경제를 잘 이해할수록 우리나라에선 그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오석 원장=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본주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도 많다. 원인을 분석하고 바로잡는 작업이 중요하다.

◆박교수=저소득층의 계층 상승이 어려워지면서 좌절감이 팽배한 영향도 있는 것 같다.

◆현 원장=응답자의 상당수는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운이나 배경’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과거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라고 보아진다. 양질의 일자리를 자주 창출해야 사람들의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

◆김 원장=2004년에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상황이 나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지금처럼 비판적이지 않았다.

◆현 원장=‘반값 등록금’도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다. 2004년에도 등록금이 비쌌는데 왜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됐을까.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면 지금보다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등록금뿐만 아니라 취업 스펙을 쌓는 데



‘흔들리는 시장경제’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왼쪽부터), 김호식 시장경제연구원장,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3일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렸다.

/허문헌 기자 sweat@hankyung.com

당한 비용을 들이는데도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 당연히 시스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해결 방법을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지 않고 정부 개입을 통해 찾으려고 하는 데 있다.

◆박교수=재래시장·중소기업 보호, 소득 재분배 문제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현 원장=재래시장 상인이나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복지정책 너무 이념화
경제성 원리 적용해야
우선순위 정해 지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원리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변 도로에 이면주차장을 허용했다. 그러자 주변 교통이 더 혼잡해졌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외면한다. 불편이 생길 때마다 정부에 호소하면 시장만 왜곡될 뿐이다.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중소기업이 보호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박교수=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복지 확대에 동의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원장=최근의 복지 논쟁이 지나치게 이념화되고 있다. 복지는 경제성의 원리

로 풀어야 한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용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경제원칙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별적 지원으로 가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면 오히려 취약계층을 필요한 만큼 도와주지 못하게 된다. 특히 젊은층에서 복지를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김 원장=동감한다. 복지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재원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

대기업 진출제한 만으로
재래시장 보호 못받아
인프라 늘려 경쟁 키워야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면서까지 지금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건 무책임하다.

◆박교수=아르헨티나는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달성한 뒤 지금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양당제하에서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하면서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경쟁을 한 결과다.

◆현 원장=좋은 예다. 그리스도 1990년대 중반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가 굉장히 강화됐다. 보수색채의 야당도 여기에 동조했다. 무차별 복지 확대에 전혀 제동이 안 걸렸다.

◆박교수=대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현 원장=수출을 통해 성장한 대기업이 성장과실을 많이 가졌다고 보는 것 같다.

수출이 아니면 내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분법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는 없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은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다. 대기업의 역할도 인정해줘야 한다. 대기업을 누르고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김 원장=반기업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들도 노력해야 한다. 기업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는 국민과 기업 간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박교수=국민들은 아직도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다.

◆현 원장=여전히 미흡하다. 이익집단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감기약을 약국에서만 팔도록 한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집단이기주의가 너무 많다.

◆김 원장=경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과감하게 규제를 풀 수 있다. 경쟁에서 탈락하는 계층을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박교수=시장이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도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은 건 문제다. 원인은 학교에서 시장원리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다.

◆현 원장=과부와 애는 교육을 해야 한다. 지금은 대학입시 선택 과목에서도 경제교육이 외면받고 있다. 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통해 자기책임 원칙과 리스크 관리를 배운다.

◆김 원장=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경제교육을 중요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정리=서보미 기자 bmsno@hankyung.com

정부,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

불법 다단계 이달중 조치
커피전문점 불공정 행위 조사

정부가 대학생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

한 20여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 이달 중 폐업·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카페베네 등 대형 커피전문점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다단계·커피전문점 단속

정부는 제2의 ‘거마대학생(등복음)을 벌기 위해 집단으로 합속생활을 하며 불법 다단계 일에 종사하는 대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모집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폐업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무점포 창업 등 각종 변종다단계나 후원방문판매로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다단계업체는 2002년 419개에서 2008년 66개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또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카페베네, 할리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토크앤토크 등 국내 커피전문점 브랜드들이 모두 포함된다. 직영점으로부터 운영되는 커피빈과 스타벅스 등 외국 브랜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커피전문점뿐만 아니라 최근 급성장한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해 일종의 표준계약서인 ‘모범가맹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가 불만이 많은 금융 및 온라인 분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IPTV(인터넷 TV)와 은행·저축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계약서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게임·유흥 숙박 대형·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도 올해 중 만들기로 했다.

◆전통시장 이용, 소득공제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전통시장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현재 20% 공제, 300만원 한도에서 30% 공제 400만원 한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허용되는 도로의 수도 크게 늘린다. 골목 슈퍼 1만



김황식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전통시장 카드 공제 확대

금융 불공정 약관 단속

등록금 인하 추가 대책 추진

서민생활 대책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 다단계 20여개 업체 2월 중 직권 조사 및 폐업 과징금 등 조치 완료
-카페베네 등 커피전문점 가맹본사 불공정행위 단속
-금융 온라인 분야 불공정약관 집중 단속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허용 확대
-나들가게 1만개 육성
-창업지원자 1만7000명에 실전형 성공창업 패키지 교육
▶교육과학기술부
-신학력 향상과 등을 위한 대학재정 수입의 다변화
-학교회계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대학평가에 반영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전 부처로 확대 적용(2월 내까지)

개를 현대식 점포인 나들가게로 바뀌우고,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하면 신고할 수 있는 ‘사업조정지원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을 내리기 위한 각종 대책도 추진된다. 현재 전국 337개 대학 중 등록금 인하를 결정한 대학은 219개이고 이 중 5% 이상 내리기로 한 곳은 146개교다. 아직까지 서민들이 체감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정부는 학교회계에서 교직원 연금을 충당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완화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선 기자 inkings@hankyung.com

선거/올림픽 국면가열용 글로벌 본격 유동성밸리 시작됐는가? 지수바닥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 글로벌 본격 유동성밸리 시작됐는가? 목표치는?

유럽 1조5천억 유로 국제채입으로 상반기 만기도래 국제 소하, 재정위기 완화, 미국 일부 경제지표 둔화시 추가부양 시사, 중국/유럽외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견조한 상승세 본격 유동성밸리 시작됐는가? 신주도주 및 5배 폭등주 당장 매수종목은?

삼성전기(증권)/LG전자(화학)/호성/한진해운/OCI/동일철강/디지탈텍/우리들생명과학/바른손/위노바 ELW(신한1A89 OCI를 35원 → 165원/선물옵션, ELW 1백만원이상으로 매일 30%이상 수익창출 특별기법 공개. 3년 10배 종목은?

① 런던올림픽 IT 랠리 목표가는? 유동성밸리 원자재/태양광/금융건설/원화강제 수혜주 랠리 목표가는? 선거국면 상한가 5회 폭등주는? ② 신모바일혁명 폭등대장주는? 신대선 급등주는? 올해 LED 조명 보급 3배 폭등대장주는? ③ 전기차 렌터카 2차전지 선도 급등주는? 바이오 대박주는? ④ IT + BT + 복지 환상조합 3배 폭등주는?

대세판단 지정 1인자, 대시세종목 1인자, 선물옵션/ELW 60배의 대적종 및 적종률 95% 이상 문자서비스 박헌주 회장, 동일철강 200%, 바른손 300%, 동성화학 900%



박헌주 회장 (현상환) 대표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경영대학원
대우증권 5년, 삼성증권 10년 펀드매니저
주식/선물/옵션/ELW/원화 수익률 1인자, 서울 1인자
대세판단 1인자 / 주주 / 세무 / 4대세 / 원화 1인자
KBS, MBC, 한경와우, 증권해설가, 경제전문가

조승제 회장
고려대 경영대학원
前 미래투자자문 대표
前 KIS투자연구소 회장
미래자산관리 회장
주식운용전문가 / 대시세종목 전문가

SJM투자자문(주) (삼성금융)
www.diatv.co.kr (핵심유량주, 논스톱상한가 종목 3인방 추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 역약 : 021565-6160 (6379), HP : 018-352-1980

서울/부산
일시 : 2월 5일 (토) 오후 2시 ~ 5시
장소 : KTX 용산역 4층 글로리 IV실
용산역 3층 대합실에서 KTX 북쪽 승강 엘리베이터 이용

일시 : 2월 4일 (토) 오후 1시 ~ 4시
장소 : 부산 토즈 서면점 마리아사건물 4층 서면역 7번출구 100M 전방

강사 : 박헌주 회장 (주식/선물옵션/ELW 1인자)
조승제 회장 (강연할), 주선, 위련박
강연료 : 회원 3만원 (수익률이 높아서) 일반 1만원 (무료입장 교재無)
○ 2012년 증시/경제전망 특별교재 제공

광주/울산
일시 : 2월 5일 (토) 오후 4시 ~ 7시
장소 : KTX 광주역 1층 입석대실

일시 : 2월 4일 (토) 오후 5시 ~ 7시30분
장소 : 울산 태화관광호텔 1층 회의실

강사 : 박헌주 회장 (주식/선물옵션/ELW 1인자)
조승제 회장 (강연할), 주선, 위련박
강연료 : 일반 1만원(무료입장 교재無)
○ 2012년 증시/경제전망 특별교재 제공

10조클럽 VIP GOLD 회원 가입안내
- 주시 3개월 : 3백만원 - 선물옵션/ELW/FX 3개월 : 3백만원 - 주식/선물옵션 3개월 : 5백만원
- 지수, 선물옵션 S/M/평균, ARS/생방송 제공, 한도 문자서비스 제공 (5개월 : 100만원, 전 : 250만원)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1001-660425 예금주 : 삼성금융

올해 말 3,000P 돌파 유동성장 시나리오 [원전무료강의]를 통해 전격 공개합니다.

※ 유동성장 열로움 ▶ LG화학, OCI, SKC, S-Oil, 호남석유, 현대차, 현대제철, 삼성전기, LG전자, 삼성SDI,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3,000P 돌파 실적유량주 선취매 위한 『월 80만원』 특별회원 모집 기간
VIP회원 특별할인가 : 3개월 200만원, 6개월 350만원, 12개월 600만원

Euro·Dollar Carry Trade 자금이 역외(域外)시장인 유로통화시장(ECM, Euro Currency Market)을 통해 본격적인 Carry Trading으로 유동성장이 펼쳐지면서 올해 말 종합주가 지수 3,000P 돌파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중앙은행(ECB)이 대규모로 제공한 1차 3년 만기 저리자금 주재한 대출(LTRO)로 ‘심각한 신용 위기(serious funding crisis)’가 예방되었음 2월말 2차 3년 만기 저리자금의 대량 공급으로 유로존 경기사이클은 침체에 벗어나고 있다.

미국 경기지표의 호전과 유로 2012(6월 8일~7월 1일), 런던올림픽(7월 27일~8월 12일) 등 대형 이벤트로 IT업종(반도체·전기전자·태양광발전)이 상반기 증시를 주도하고 유로존의 간접적인 양적완화로 유동성장이 펼쳐지면서 조선업종과 대중주(은행·증권·건설업종)가 부활하고 있으며 중국 긴축완화 기대감으로 글로벌 경기사이클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조선·철강·기계·정유·석유화학업종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시황분석가 김석일 회장 韓 한국투자연구소 회장 국제금융·투자자문 분석가 ECMI(Euro Currency Market) 분석가 한국경제TV, 이투데이TV, 서울경제TV 팩스넷, 생크롬 전문방송 상장그룹, LG그룹, 현대차그룹, OCI그룹, 정유, 화학, 시멘트LSI	논현2동 주민센터 (土) 일시: 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강소: 논현2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 (강남구청역 3번출구에서 직진 (이형복산부인과)까고 우회전 150M지점) ▶참배: 완전 무료 (자료제공)	을지로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日) 일시: 2월 5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강소: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 3층 대강당 (을지로3가역 2번출구 또는 3번출구 50M직진후 골목안) ▶참배: 완전 무료 (자료제공)	변호사 임창기 ▶ 우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중국정법대학 도산법 과정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外資 M&A에 대한 中國의 産業 保護法制研究” 논문 기고 ▶ 세계소재지역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수원시, 부산진법회 등 공문변호사 ▶ 김충환합건설 등 파산관재인 역임 ▶ 현대증권, (주)에이엠피 등 파산관재인 ▶ 법정부법인 다온(DAON) 파트너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13 통우빌딩 4층 02) 3477-7722
VIP 회원가입 특별할인 행사가 주시 3개월 : 200만원 6개월 : 350만원 12개월 : 600만원 (카드할부가능)			
글로벌경제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우신빌딩 10층			